

보도시점 2023. 12. 30.(토) 배포 2023. 12. 29.(금) 09:00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⑩]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

-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제 입법화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주요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금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국정과제)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23.11.17)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244건('19) → 15,111건('20) → 22,752건('21) → 14,053건('22)

** 8.6%('19) → 47.7%('20) → 73.4%('21) → 64.4%('22)

[경찰청]

금년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 (기준) 약 703만 가구 → (확대) 약 717만 가구('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국정과제)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24.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금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정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금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번 법률 개정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권주성 (02-2100-278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2781)
	금융안전과	책임자	사무관	강준모 (02-2100-2772)
			과 장	김수호 (02-2100-2970)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남명호 (02-2100-2974)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1690)
	혁신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1691)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심원태 (02-2100-2534)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1)
		담당자	사무관	조윤수 (02-2100-2682)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서승리 (02-2100-2962)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이정찬 (02-2100-2824)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홍재선 (02-2100-2922)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김경문 (02-2100-2612)



붙임

'23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현황

□ '23.1월 이후 본회의 통과 법안 총 28건(국정과제 관련 법안 7건)

법률명	주요 내용	통과 일자
외부감사법	· 투자자 등 제3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증선위에 증선위 안건, 의사록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23.2.27.
은행법	·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 상향규정(「은행업감독규정」→법률)	'23.2.27.
인터넷전문은행법	· 現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목적의 신용공여는 허용	'23.2.27.
농어가저축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의 범위 확대	'23.2.27.
신용협동조합법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률에 명시	'23.2.27.
여전법	· 전자문서를 통해 약관 주요 거래조건 등 제공 허용(신용카드사할부금융회사)	'23.2.27.
자본시장법	· 조치명령 대상 확대, 구체적 수단 규정, 요건 구체화	'23.2.27.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23.2.27.
화재보험법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안전점검시, 정해진 서식 활용 의무화 · 화보협회가 안전점검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23.2.2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및 제재 강화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23.4.27.
금융소비자보호법	·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 의사등록, 판매자 입증책임,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무효 등 규정	'23.6.21.
자산유동화법	·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23.6.21.
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주택가격 상한 확대(9억→12억) * 국정과제 9-3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3.6.21.
위원회정비법(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 국정과제 13-2(행안부 주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3.6.21.
신용협동조합법	· 신탁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23.6.30.

법률명	주요 내용	통과 일자
상호저축은행법	·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임원 연대책임 완화	'23.6.30.
가상자산법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국정과제 35-1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23.6.30.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국정과제 36-6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23.6.30.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의 보호,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등 규정	'23.8.24.
행정법제혁신법	·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23.8.24.
보험업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3.10.6.
지배구조법	·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 국정과제 34-1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對고객 책임성 제고	'23.12.8.
신용협동조합법	· 조합원 자격요건 및 적립금 규정 등 개정	'23.12.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을 3년 한시법으로 재입법 ·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정비 및 제3자 신규신용공여 제도 신설	'23.12.8.
개인채무자 보호법	·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연체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추심 부담 완화	'23.12.20.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회계사 10명→7명) ·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마련	'23.12.20.
신용보증기금법	·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23.12.20.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 부과 * 국정과제 36-5 :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23.12.28.